2월 임시국회 돌입… 사법개혁법안 두고 여야 '폭풍전야'

與, 재판소원법 등 설 전 처리 목표
법조계·野 "사법부 옥죄는 법안"
필리버스터 정국 재현 전망도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90여건의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빚을 전망이다.

2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3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법 현안을 설명하고 상대 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을 중점에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하는 법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고환율·고물가 등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쟁점법안 처리가 연기된 만큼, 2월 임시회에선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국민 기본권 침해 구재를 위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의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도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고의로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형 15년에도 징역 1년8개월에 그친 것을 두고 법왜곡죄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은 사법부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법안 강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으로,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에선 친여 성향의 대법관들을 대거 등용하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세 법안의 설 연휴 전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제계에서 주목하는 2월 임시국회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2월 3일) 법사소위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소위에서 논의가 잘 풀리면 2월5일 본회의 처리도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설탕세 아닌 설탕부담금" 토론 제안

"허심탄회한 토론·공론화 필수
무조건 반대나 왜곡 주장 사양"
제안 두고 '우회 증세'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제안이 '설탕세 논란'으로 번지자 직접 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며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설탕부담금은 설탕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설탕과다사용부담금'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 정부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었다.

최근 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만큼, 설탕부담금 등 건강부담금을 활용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직접 나서 '우회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의 목적은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며 "걷히는 재원이 0원에 수렴할수록 성공하는 독특한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로 설탕부담금을 통해 식품에 설탕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영국은 2018년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했는데, 2015~2024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사이에 4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해당 정책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의도대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

"살아난다 한동훈"… 제명에도 여진 지속

징계 가처분 신청 여부 관심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한 전 대표의 제명 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직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한 이후 이번 주말 한 전 대표 지지자 수천명이 국회 앞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하고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집회의 참여한 군중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유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들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야인'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법원에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지난달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도 이미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놓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신,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한정애 "부동산 세제 개편 배제 안 한다"

〈與 정책위의장〉
"당정 모두 집값 안정 의지 가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세제 개편을 통합 집값 안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본다"며 "세제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님과 당이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